

2020년 07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1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7 (Vol.61)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8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0년 07 (Vol.61)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광주시, 광주형 AI-그린뉴딜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추진계획 발표

9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21개 선정

국토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우수작 25점 선정
국토부,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등 숲 조성에 '25년까지 1조 원 투자
부산시, 빈집재생 종합대책 '빈집 LIGHT UP 사업' 실시
경남도,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추진
경남-부산-전남,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5

국토부,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 개최
중기부,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 선정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충남도, 충남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도시재생사 양성 위한 심화과정 개설
경남도, 경남형 어촌뉴딜사업 위한 협업부서 간 플랫폼 구성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7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0.07.07.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div>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div>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
<div>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div>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 마련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0.07.21.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2020.07.21.

완료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이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주거재생과, 2020.07.22.

완료

도시
정책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현행	개정안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과, 2020.07.14.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②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③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④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있다.

경기도,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건축디자인과, 2020.07.28.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7.08.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법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국토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도시분야는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설분야도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총 14건의 현장어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도시분야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
건설분야	포용기반 확충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맞춤형 개선
	불필요한 비용감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경영여건 개선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 마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국토정책과, 2020.07.13.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6대 전략	실천과제 수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8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6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23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32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31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8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하고, 국토정책의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산업입지정책과, 2020.07.29.

완료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은 기존계획에 6개가 추가된 것으로 경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경기 1개소가 각각 추가 반영되었다.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개발과, 2020.07.15.

완료

국토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평택 포승지구 조감도(좌), 토지이용계획도(우)]

광주시, 광주형 AI-그린뉴딜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추진계획 발표

에너지산업과, 2020.07.21.



광주광역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 비전 선포와 함께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① AI기반 ‘디지털 뉴딜’, ② 탄소중립(Net-zero)의 ‘그린뉴딜’, ③ 상생·안전의 ‘휴먼뉴딜’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45년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비전 보고를 통해 ‘광주형 AI-그린뉴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녹색분권	① 시민·기업주도 에너지 분권 기반 확립 ② 마을단위 에너지AI 데이터 챌린지 ③ (재)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및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
녹색 발전	④ 소규모 그린E 보급·확대(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소 등) ⑤ 중규모 그린E 보급·확대(공동주택, 빌딩, 주차장 등) ⑥ 대규모 그린E 보급·확대(공장, 도로, 산업단지 등)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	⑦ AI 기반 광주시 전역 국민DR 플랫폼 구축 ⑧ 에너지 AI 분산자원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⑨ 수송분야 V2G(전기차, 수소차, 그린충전) 적용확대



국토부,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산업입지정책과, 2020.07.06.

완료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희부지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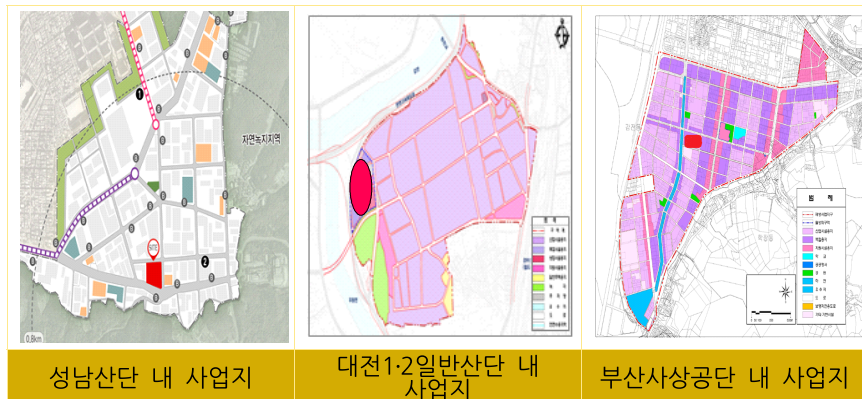
산단 상상허브 선정 사업지

(성남일반산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2, 대유위니아 부지
(대전1·2산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61-1 일원, 산단 내 유희부지
(부산사상공단)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5, (주)J&Company 부지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개발하고자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20.3.2~5.15)를 통해 선정하였다.

‘산단 상상허브’ 사업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재생사업 기반시설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상허브 사업지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21개 선정

지역정책과, 2020.07.10.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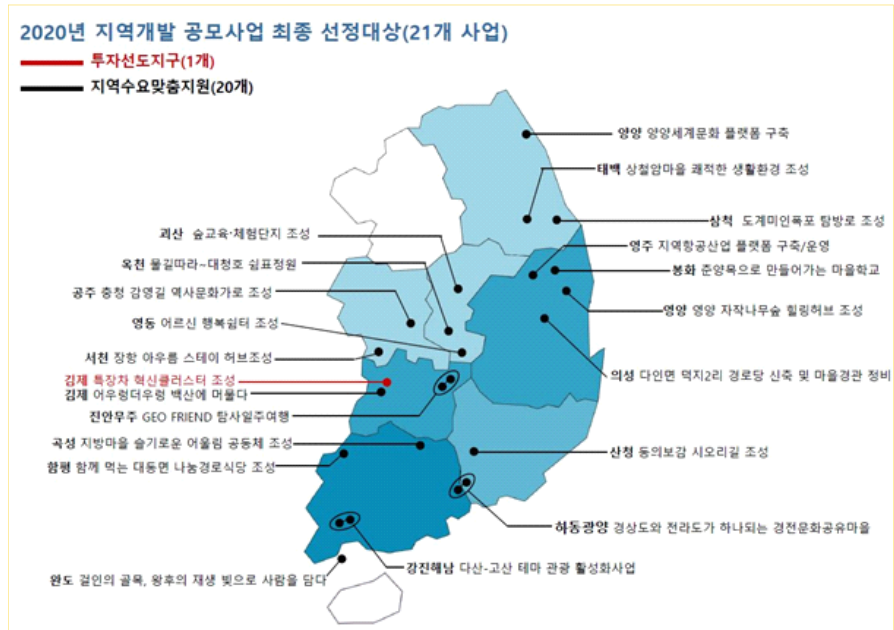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발굴·지원
지역수요맞춤 :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020 지역개발 공모사업 최종 선정대상(21개 사업)]

국토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우수작 25점 선정

건축문화경관과, 2020.07.16.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경관·디자인 조성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분야 국내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행사로, 올해 국토대전은 자연경관, 공공디자인 등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도시재생), 2개 경관행정 부문의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일반 부문) ①자연경관, ②가로 및 광장, ③주거·상업·업무단지, ④공공·문화건축, ⑤공공디자인, ⑥사회기반시설
(특별 부문) ⑦특별주제(도시재생 및 생활SOC)
(경관행정 부문) ⑧협업분야 ⑨사업분야

구 분	부 문	작 품 명
대통령상	사회기반시설	천사대교(암해~암태) 제1공구 건설공사((주)디엠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특별부문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서울주택도시공사)
장관상 (9)	자연경관	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한국토지주택공사)
	가로와 광장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대구 남구)
	주거·상업·업무단지	세종4-1생활권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신동아건설(주))
	공공·문화건축물	남사도서관((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공공디자인	밀양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경남 밀양)
	사회기반시설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코오롱글로벌(주), ㈜삼보기술단)
	특별부문(도시재생 을 위한 유희공간 활용)	신촌, 파랑고래 건립 및 운영(서울 서대문구)
	경관행정 협업	시민참여형 경관자원조사를 활용한 경관행정효율화(충남 당진)
	경관행정 사업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수익시설로(경기 양주)

국토부,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공공주택총괄과, 2020.07.22.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 창업지원주택: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형	지역	지구명	호수	특화산업·시설
창업지원주택 (5곳)	서울	중랑신내	114	패션고도화단지, R&D
		신촌주민센터	125	주민센터복합, 창업클러스터
	경기	광명소하	140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
		오산세교	150	창업지원시설, 성장프로그램
	전남	광양성황도이	150	창업지원,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7곳)	서울	도봉창동	99	음악·문화 등 문화콘텐츠
	부산	부산사상	200	창업혁신허브, 과학기술
	인천	인천동구	200	창업지원프로그램, 영상산업
	광주	광주사직	40	영상·음악 등 문화콘텐츠
	대전	대전산단1	200	융복합 지능형 기계 등
	충북	충북혁신	300	정보통신, 과학기술분야 등
	전북	김제백구	100	특장차단지, 스마트팜
중기근로자(1곳)	대전	대전산단2	100	첨단지식 제조산업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등 숲 조성에 '25년까지 1조 원 투자

도시숲경관과, 2020.07.24.



산림청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등에 2025년까지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린 뉴딜'의 주요 8개 과제 중 하나인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 아래 3개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 도로·산단 주변 등 생활권역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723ha 조성한다. 또한, 도서관, 역사, 대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실내·외 정원인 생활밀착형 숲을 228개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37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빈집재생 종합대책 '빈집 LIGHT UP 사업' 실시

도시재생정책과, 2020.07.15.

진행

건축
정책

부산시가 불 꺼진 도심 빈집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밝히기 위한 ‘빈집 재생 종합대책’인 「빈집 LIGHT UP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심지역의 빈집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회·경제·문화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빈집을 활용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주거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활용이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개 분야로 나눠서 정비한다. 시는 ①마을작업장(DIY·메이커스페이스) ②예술가 레지던스(예술가 레지던스·문화카페·작은도서관·복합문화공간) ③햇살보금자리(케어센터·청년임대·공유(순환)주택·기업임대·안심쉼터·기존햇살동지) 등 3개 분야 12개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철거대상 빈집은 건물을 철거한 후, 주민 쉼터와 마을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개발사업과도 적극 연계한다.

철거대상은 아니지만, 활용이 어려운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직접 마을 빈집을 순찰하는 ‘빈집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동네를 조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추진

사회혁신추진단, 2020.07.02.



경상남도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유희공간을 주민 카페, 작은도서관, 공유주방 등 입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조성 공간의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자 경남 공공건축가들과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해 공간구성에 관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남-부산-전남,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대외협력담당관, 2020.07.31.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는 지리적 여건과 산업 구조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3개 시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했다.

또한 총 7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채택된 과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공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향만물류 도시협의체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국토부,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 개최

국가공간정보센터, 2020.07.06.

완료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경제의 원천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7월 6일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관 간 정보의 융·복합 활용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공간정보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를 축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이 제공한 공간정보는 이전 협약기관*과 공유되고, 민간에도 제공되어 활용성이 한층 확대될 계획이다.

* '19년까지 37개 기관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양방향 연계 개념]

중기부,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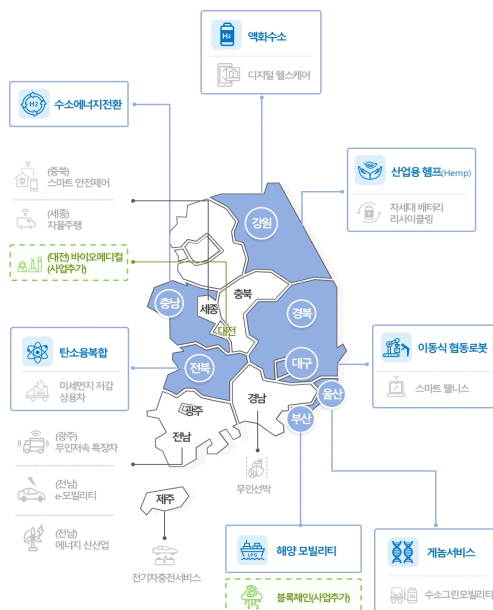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20.07.06.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개념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 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규제자유특구]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 선정

도시경제과, 2020.07.19.

완료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법,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계룡시, 금산군
부산	동래구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전남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	북구, 울주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경기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경남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하동군
강원	태백시	-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혁신도시정책총괄과, 2020.07.30.

완료

도시
정책

정부는 7월 30일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향후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우수 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충남도, 충남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건설정책과, 2020.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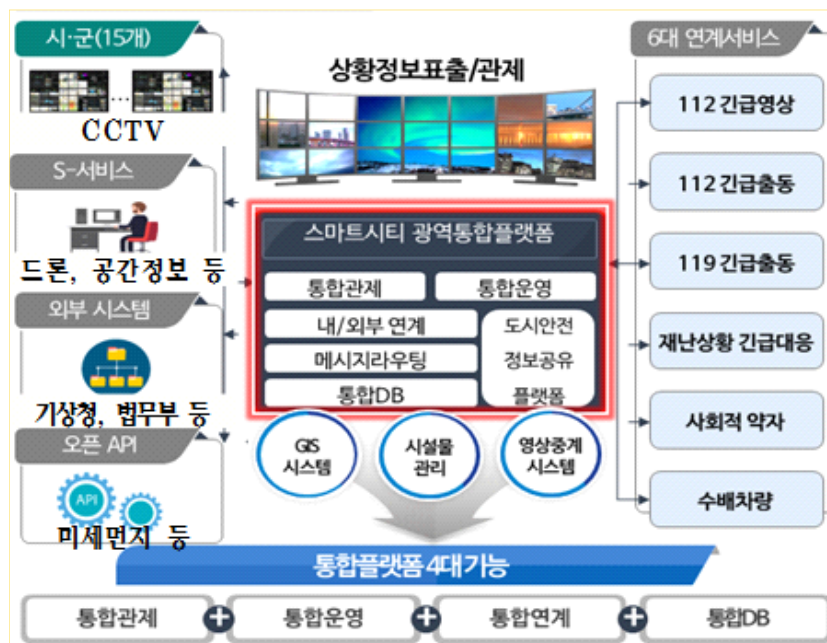
진행

도시
정책

충남도와 15개 시·군 등 19개 협력기관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충남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안보, 재난, 범죄, 화재, 교통, 사고 등 각종 상황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난·재해, 구급상황 등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CCTV 영상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도를 비롯한 19개 협력기관은 향후 ‘충청남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단’을 구성, 각종 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한 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충남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개념도]

경남도, 도시재생사 양성 위한 심화과정 개설

도시계획과, 2020.07.20.



도시
정책

경상남도가 도내 도시재생 고급 전문 인력인 ‘경남형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 경남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개설했다.

그 동안 경남도는 ‘경남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 현장 실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도시재생 사업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남도 도시재생사’ 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개정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 분야 현장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경남도지사가 발급하는 도시재생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남도, 경남형 어촌뉴딜사업 위한 협업부서 간 플랫폼 구성

해양수산과, 2020.07.20.



국토
정책

경상남도는 지속 가능한 ‘경남형 어촌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협업 부서 간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어촌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플랫폼’에는 ①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양성하는 사회혁신추진단, ② 마을기업 멘토-멘티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추진단, ③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청년정책추진단 등이 참여한다.

도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형 어촌뉴딜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첫째, 경남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어촌뉴딜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및 청년 창업가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형 어촌뉴딜사업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를 위한 공모 준비를 위해 넷째, 기존 마을기업 관리·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마을기업 멘토-멘티 멘토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도에 구성되어 있는 어촌뉴딜사업 자문단을 현장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